

2017

법률정보 조사과정

일시 Ⅵ 2017. 5. 18. - 5. 19.(2일간)

장소 Ⅵ 국회의정관 교육장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17

법률정보 조사과정

일시 Ⅵ 2017. 5. 18. - 5. 19.(2일간)

장소 Ⅵ 국회의정관 교육장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교 육 일 정

구 분	5월 18일(목)	5월 19일(금)
오전 (09:00 ~ 12:00)	미국법의 이해와 법률정보조사 오일석 (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교수)	그림으로 읽는 법 이야기 양지열 (법무법인 가을 대표 변호사)
12:00 ~ 13:30	점 심 시 간	
오후 (13:30 ~ 16:30)	표절론 특강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랑스법 체계와 법령정보원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01. 미국법의 이해와 법률정보조사	1
오 일 석(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교수)	

02. 표절론 특강	19
남 형 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3. 그림으로 읽는 법 이야기	35
양 지 열(법무법인 가을 대표 변호사)	

04. 프랑스 법체계와 법률정보원	45
권 채 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법의 이해와 법률정보조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법학박사)
오 일 석

차례



- 미국법 체계
- 입법과정
- 법률정보조사

미국법 체계

2

연방국가

연방 국가 50개 나라

- 각 주는 입법(legislative), 행정(executive), 사법(judicial), 삼권이 분리된 완전한 형태의 정부를 가지고 있음
-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서로 공존할 수 있을까?

3

연방국가



연방국가



연방정부 vs. 주 정부

- 각 주 정부의 독립성 인정에 바탕을 둠 (미국은 독립된 50개의 주(나라)의 결합(union)으로 구성).
- 각 주는 연방 헌법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함.
원래 13개 주의 대표들이 연방 헌법에 의하여 제한된 권한의 연방 정부를 창설함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가 통제하는 법률적인 영역(legal area)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만일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동일한 문제(same issue)에 대하여 자신들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연방국가



다층적 주권

- 연방(국가) 정부와 주 정부라는 2개의 정부가 존재
 - 이 두 정부는 미국 전체에 걸쳐 공존하며 운영됨
- 각 주는 자신들의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법원 조직(court system)을 가지고 있음
- 또한 각 주안에는 많은 지방 정부들이 있음
 - cities, counties, etc.
-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방, 주 및 지방(federal, state, municipal)의 법률들을 각각 이해하여야 함

6

연방국가



연방정부 vs. 주 정부의 권한

- 헌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가 아니면, 주 정부는 자신의 주권의 범위 내에서 그 주에 대한 모든 정부 권한을 행사
- 미국 연방 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열거하고 있는 바, 연방정부 권한으로 특정되지 않은 권한은 모두 주 정부가 보유

7

연방국가



주 정부에 대한 연방 우선

- 미국 연방헌법의 우선조항(The Supremacy Clause of the US Constitution)은 미국 연방헌법 및 연방법이 주 정부의 법에 우선함을 규정
- 따라서, 미국 의회는 주 정부가 연방법에 배치되는 법규 등을 입법화하는 것을 차단하고, 연방법을 우선시킬 수 있음

8

연방국가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 연방 헌법은 정부를 입법(legislative), 행정(executive) 및 사법(judicial)의 3부로 설립하고 독립적인 기능과 책임 부여
- 견제와 균형 ("[checks and balances](#)") 원칙을 정립하여, 권력 집중에 따른 전제정치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 시민의 권리와 자유(rights and liberties of citizens)를 보호하기 위함
 - 대통령의 의회 승인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 미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의 의회 통과 법률 및 대통령 행정명령 등에 대한 위헌 결정
 - 의회의 대통령 및 연방 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impeach)

9

보통법 체계 : 선례구속

- 정형화된 법전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법을 형성하는 보통법 국가임
- 각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바로 법이 되며, 이후의 판결에서 같은 주 또는 같은 관할권(jurisdiction)의 판사는 이전의 결정을 따라야 함

10

보통법 체계 **but** 제정법

- 정형화된 법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전통적으로 미국의 법은 각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의 형태로 존재함
- 그러나 미국 의회는 **헌법 제8조 통상규정(Commerce Clause)**에 따라, 주 및 국가 간 거래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음
 - * 이에 따라 노동, 증권, 반독점, 은행, 통신 등의 분야에서 여러 연방 법률(이를 제정법(statute)이라 함)이 제정됨
- 그러나, 불법행위법(tort), 가족법(family), 형법(criminal), 및 계약법(contract)과 같은 분야는 여전히 보통법의 지배를 받으며 제정법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음

11

보통법 체계 : Case Law

- 미국법체계에서 두 가지 Case Law가 존재 :
 - 헌법(constitutions), 제정법(statutes) 행정규칙(administrative rules) 등 제정/시행되고 있는 법에 대한 Case Law 케이스 법
 - 보통법("Common law") - 제정법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분야에서 케이스에 대한 판결에 의한 Case Law

18

법원 (Source of Law)

- 법원(The sources of law)은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음
- 연방법이 주 법에 우선(supremacy)하므로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하는 경우 연방법 우선
- 계층구조(HIERARCHY):
 - 1. 성문법
 - 연방 성문법(Federal Enacted Law)
 - 미국 연방 헌법(U.S. Constitution : 최상)
 - 연방 제정법(Federal statutes) 및 조약(treaties)
 - 연방 행정 규칙(Federal administrative rules), 규정(regulations), 법원 규칙(court rules), 행정 명령(executive orders)

19

법원 (Source of Law)

- 주 성문법(State Enacted Law)
 - 주 헌법(State constitutions)
 - 주 제정법(State statutes)
 - 주 행정규칙(State Administrative rules), 규정(regulations), 법원 규칙(court rules),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 주 정부 제정조례(State municipal enactments) : 주 조례, 시 조례(state and city ordinances, etc.)

2. Case Law

- 법원 판결(Judicial decisions)

14

주법원 vs. 연방 법원

- 주 법원은 연방 법원 관할 사건이 아닌 모든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짐
- 연방 법원은 연방 제정법에 따라 관할로 지정된 연방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음
 - 연방 문제(**federal question**)와 다른 주 시민간 소송사건(**diversity case**)이 대표적임
-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주 법원과 연방 법원이 동시에 관할권을 가짐 (**concurrent jurisdiction**)

15

사법체계



연방 법원 체계

- 연방 법원은 연방 지방법원, 항소심법원, 대법원으로 이루어짐
 - 연방 지방법원 : 각 주에 최소 하나의 연방 지방법원이 있음
 - 연방 항소심법 :
 - * 대부분의 연방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짐
 - * 13개의 항소심 법원이 있음
 - 연방 대법원
 - * 외교 및 각 주가 당사자인 사건에 대한 원심법원
 - * 연방사건에 대한 최종심

16

사법체계



Geographic Boundaries

of United States Courts of Appeals and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17

사법체계



주 법원 체계

- 각 주는 각각의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음
- 각 주 법원은 연방법원 관할 이외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음
- 각 주 법원은 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으로 구성됨
- 다만 명칭이 다를 수 있음
 - *뉴욕주의 경우 **Supreme Court**가 지방법원임
 - * 항소법원은 **Appellate Division**
 - * 대법원은 **Court of Appeals**

18

사법체계



연방 법원 사건 – 연방 문제

- 외교특권을 갖는 대사 또는 외교 직원과 관련된 사건
- 해상사건
- 미합중국이 당사자인 분쟁
- 주 사이의 소송 또는 주와 다른 주 시민 사이의 분쟁
- 동일 주 시민이 다른 주 토지에 관한 소송 등
- 주 또는 그 시민의 다른 주 또는 그 시민 사이 소송

19

사법체계



연방 법원 관할 사건 : 다른 주 시민 사이의 소송

- 연방의 다른 주 시민간 소송사건 제정법([28 U.S.C. § 1332](#))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주의 시민이 아닌 완전히 다른 주 시민이어야 하고,
- 소가가 **\$75,000**을 상회하여야 함

80

사법체계-actual case



Lefkowitz v. Great Minneapolis Surplus Store, Inc 86 NW 2d 689 (Minn, 1957)

ANDREWS v. UNITED AIRLINES, INC, 24 F.3d 39 (9th Cir. 1



NEGRI v. STOP & SHOP, INC. 65 N.Y.2d 625 (1985)



81

입법과정

12

입법 과정

의의

- 법률적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 그 첫째 단계는 위 법률적 문제가 제정법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함
- 각 주 의회(State Legislatures) 및 미 연방 의회(United States Congress)가 제정법을 입법할 수 있음
- 입법부는, 보통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또는 보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제정법을 창설하기 위하여 입법함

13

입법 과정



절차



2.4

입법 과정



제안

- 제안자 : 상원은 인원제한 없지만 하원은 25명 내에서
공동으로 제안 가능
- 법안의 종류
 - 공익 법안(public bills)
 - 사익 법안(private bills)
- 제출형식 : 법안(bill),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 공동
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결의안(resolution)
 - 하원(HR)
 - 상원(S)

2.5

입법 과정



위원회 심의

- 상임위원회
 - 법안 접수, 정부 관계기관 의견 청취, 청문회 개최, 심의
 - 소위원회 건의를 참고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 결정
- 소위원회
 - 법안 심의 후 조치 건의 또는 수정 제안
- 상정 결정하면,
 -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안자가 보고서 작성
 - 소수의견 수록
 - 하원의 경우 규칙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 송부

86

입법 과정



본회의 심의

- 위원회 보고 법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
- 토론
- 표결
 - 독회 및 최종 표결

양원협의회

- 상원과 하원 중 한 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다른 원에 송부
- 다른 원이 미미한 수정을 하고 원래 제출 원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대통령 송부
- 그러나 상하 양원이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양원협의회에서 법안을 심의
- 양원협의회는 중진의원들로 구성하며, 각 원에서 지명된 3-9명의 의원들로 구성

87

법률정보조사

22

법률정보원

제1차 자료 : 법령자료

- 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
- United States Code(U.S.C)
- United States Code Annotated(U.S.C.A)
- United States Code Service(U.S.C.S)
- Code of Federal Regulation(C.F.R)

제1차 자료 : 판례자료

- United States Reports(연방 대법원 판례집)
- Federal Reporter(연방 항소법원 판례집)
- Federal Supplement(연방 지방법원 판례집)
- 주 법원 판례집(Ohio State Report, Minnesota Reports)

23

제2차 자료

- Treaties
- American Law Report
- Law Review, Law Journal
- Restatement

20

공식 온라인 법률정보원

- 연방 법률정보 웹사이트(<http://www.congress.gov>)
- GPO(<http://www.gpo.gov>)
-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http://uscode.house.gov>)
-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http://www.ncsl.org>)

21

상업적 온라인 법률정보원

- LexisNexis(www.lexisnexis.com)
- Westlaw Classic(<http://web2.westlaw.com>)
- Bloomberg Law(<http://www.bna.com/bloomberglaw>)
- Hein Online(<http://heinonline.org>)

28

Q & A



표절론 특강

- 학술 저작물 표절을 중심으로

남 형 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저작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아이디어/표현

저작권법의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아이디어/표현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표절과 저작권침해

• 표절(剽竊, Plagiarism)의 정의

- 저작권침해(무단이용) +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양 발표” (윤리적 비난가능성 추가)
- Passing off

• 저작권침해와의 차이

- 표절 : 저작권보호대상 무관(Idea, 보호기간만료)
- 침해 : 속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출처표시 했어도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음)
- 피해자론 : 피표절자의 동의가 면책 근거되나?
(국내사례, Faulkner 사례)

표절 정의

모델지침(안) 1. [표절의 정의와 유형]

가. 이 규정에서 말하는 표절에는 "전형적 표절"과 "비전형적 표절"이 있다.

나. 전형적 표절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인 양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비전형적 표절

"전형적 표절"이 아닌 경우로서 표절로 보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출처표시를 제대로 했더라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인용한 경우

(2) 자기표절

(3) 중복게재

(4) 부당한 저자 표시

피해자론

- 피해자론 - 동의가 항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론의 실익

피해자의 범위

피표절자

독자들

해당 기관(학교)

학계 - 정직한 글쓰기를 실천하는 대다수의 학자, 연구자, 학생들

판례

인용의 목적

1. 권위의 원천 제시
2. 검증 편의 제공
3. 표절 회피 - 면책 목적
4. 부수적 목적 - 학계 선순환
 - 가. 신진 또는 소장 학자의 보호
 - 나. 독창적 연구와 학문의 선순환
 - 다. 학계와 실무계의 산학 연계
5. 인용의 폐해와 이에 대한 반론
 - 가. 인용이 많으면 글의 권위가 저하된다?
 - 나. 인용은 글의 독창성을 떨어뜨린다?
 - 다. 현학(衒學)적이다?
6. 인용과 에디토로지 - 인터넷 시대 '정직한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

출처표시

- 아이디어
 - 가. 용어의 문제
 - 나. 저작권과의 관계
 - 다. 일반지식과의 관계
 - 라. 공표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경우
 - 마. 신문 등 대중매체 상의 아이디어
 - 바. 아이디어 왜곡

구체적 쟁점 논의

- **아이디어 도용과 표절**
 - 공간되지 않은 아이디어
 - 세미나 등에서 발표
 - 토론자 보호
 - 세미나 등에서조차 발표되지 않은 경우
 - 신문 등 대중매체 상의 아이디어
- **상시화된 peer review**
 - 철저한 회의록(minutes) 작성 및 회람

출처표시

- **간접인용(패러프레이징)**
 - 가. 학술적 글쓰기
 - “원칙은 간접인용, 예외적으로 직접인용”
 - 나. 출처표시 의무는 직접인용에만 적용되는가?
 - 다. 간접인용이 도를 넘은 경우
- **재인용**
 - 가. 의의
 - 나. 원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다. 원출처를 확인한 경우
 - 라. 자기표절/중복게재의 경우
 - 마. 재인용 시 출처표시 방식

재인용의 문제

- 문제 제기
- 2차출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한 경우
 - 원출처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 널리 알려졌어도 끌어다 쓰는 분야에 생소한 경우
 - 2차출처자가 원출처를 가공하고 변형한 경우
- 자기표절, 중복게재와 재인용 문제
- 여전히 남는 딜레마
 - 불확정 개념: 일반적, 학문간 이격정도, 가공 정도
 - 판례에 의한 해결

출처표시의 단위

- 기존 논의와 비판
 - (1) “연속된 수개 단어” 제안과 비판
 - (2) “문단 단위” 제안과 비판
 - (3) “공통분모형 출처표시”: 장/절/항 단위 출처표시
- 대안 - “문장 단위”
 - (1) 원칙
 - (2) 예외 1: 의도와 맥락
 - (3) 예외 2: 들여쓰기 방식에 의한 직접인용의 경우
 - (4) 예외 3: 자기표절/중복게재 관련

부적절한 출처표시

-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
- 부분적/한정적 출처표시
- 간접적 출처표시
- 재인용의 출처표시 문제
- 부정확한 인용 용례
- 역표절과 제3의 표절
 - (1) 역표절(reverse plagiarism)
 - (2) 제3의 표절

출처표시 방법

모델지침(안) 2. [출처표시의 방법 등]

- 가. 원칙적으로 출처표시는 문장 단위로 한다.
- 나. 출처표시·인용의 방법은 학문분야 별 특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방식을 따르든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다. 연구보고서의 종류 별로 출처표시의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 라. 출처표시 의무는 간접인용(“바꿔 쓰기”)이라고 하여 면제되지 않는다.
- 마.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참고하지 않은 문헌은 참고문헌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침해 형” 표절

- “정당한 범위” 일탈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정당한 범위

가. 양적 주종관계

나. 질적 주종관계

다. 양적 주종관계와 질적 주종관계의 관계

정당한 범위

- 양적 주종 비율 = 인용된 부분 / 표절의혹 저서
전쟁사 사건(80%), 교과서 사건(6~20%), 대학본고사 입
시문제사건(2.8~9.9%)

- 질적 주종 관계

전체 아닌 특정 부분

- 양/질적 주종관계

양 주종관계 중 하나만 충족하면 정당범위 벗어남

- 학문의 종별, 저술의 종별 등 고려

자기표절/중복게재

- 이성적 논의의 필요성
- 자기표절/중복게재의 해악성(비난가능성)
 - 가. 자기표절 비난가능성의 핵심
 - 나. 중복게재 – 자기표절과 다른 관점
 - (1) 피해자의 차이
 - (2) 사후행위에 따른 비난가능성 차이
 - (가) 신분상의 이익 취득 – 비경제적 요인
 - (나) 경제적 이익
 - (3) 특수 사례 – 정부출연기관 등의 경우
 - 다. 학술지 투고규정의 문제

자기표절/중복게재

- 중복성 판단의 기준
 - 가. 기존 논문 모아 편집물 형태 저서 출간 경우
 - 나. 박사학위논문을 연구논문으로 발표한 경우
 - 다. 연구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낸 경우
 - 라. 번역의 경우
 - 마. 연구용역계약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

자기표절/중복게재

모델 지침(안) 5. [자기표절·중복게재]

가. "자기표절"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출간함에 있어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이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연구의 심화 및 적용 과정에서 자신의 기존 연구물의 일부를 가져다 쓰는 것은 자기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선행 연구물의 존재를 출처표시 등을 통해 밝혀야 한다.

나.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동일 또는 유사한 독자층을 상대로 선행 저작물의 출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게재 또는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기표절/중복게재

다. 다음 예시 유형은 자기표절·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용된 선행 저술의 존재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

- 1) 출판되지 않은 학위논문을 저서 또는 논문 형태로 출간하는 행위
- 2) 용역보고서, 정책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에 따라 작성된 저술을 별도의 저서 또는 논문 형태로 출간하는 행위
- 3) 이미 출간된 자신의 논문 여러 편을 편집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행위
- 4) 이미 출간된 자신의 논문을 편집자의 특정 목적에 따라 다른 저자의 논문과 함께 편집·출간되는 경우

라. 이미 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다른 언어로 번역 출간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번역의 목적과 필요성, 해당 학문분야의 성격, 사용된 언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저자성(著者性, authorship)의 문제

- “저자 가로채기”(제1그룹)
 - 가. 단순 아이디어 제공자도 저자가 될 수 있나?
 - 나. “기관의 장(長)” 이름으로 발표하는 행위
 - 다. 박사학위논문 지도학생의 논문상납 관행
 - 라. 자료조사자의 지위 – 학위논문 대필의 문제
 - 마. 공저의 저자성 문제

저자성(著者性, authorship)의 문제

- “저자 끼워넣기”(제2그룹)
 - 가. “역표절 형” 저자 끼워넣기
 - 나. 감수자, 교신저자, 명예저자의 문제
- 이면(裏面) 저술 문제(제3그룹)
 - 가. 정치인의 이면 저술
 - 나. 고위 공직자, 연구기관장 등의 이면 저술
 - 다. 비정치계 유명인의 이면 저술
 - 라. 법원 판결과 이면 저술
 - 마. 학계의 이면 저술 문제

공저 문제

- **공저의 종류**

여러 단계 : 편집저작물, 결합저작물, 공동저작물

- **공저 - 출처표시 완화?**
- **타 공저자의 집필부분에 대한 책임**
- **익명의 공저자 문제(Ghostwriter)**
- **기여 없는 저자 표시 문제**
- **교신저자 문제**

검증시효 및 검증주체

- **표절 시효 문제**

시효제도 일반론과 표절

시효의 기산일 문제

소급효 논란 - governing law로 해결

- **표절 검증 주체**

- "공정한 관행" : 관행 판단 주체 / 공정성 담보

- 검증의 관점

청중테스트 이론(lay person) / 학술저작물(expert)

중간/평균적 전문가 관점

사례 연구 - 국내

- 사례 (법정 사례) 연구의 중요성
- 국방연구원 사건
 - 학계와 달리 보지 않음
 - 징계시효 문제 (cf. 연구회 연구윤리지침 9조 2항 3호)
- 국가 프로젝트 사건
 - 정부발주 용역보고서의 2차적 활용
- 공동저자 사건
 -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자
- 박사학위와 연구논문 간 중복문제 사건
 - 학문의 심화과정, 독자적 가치
- 연구소원 공동논문 사건

예) 검증시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07.2.8. 과기부 훈령 제236호
개정 2009. 9. 23.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41호

제12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예) 검증시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2011.6.2. 교과부 훈령 제218호

- 검증시효 규정 삭제
- 윤리기준의 비가역적 탄력성 문제

교육부 지침 개정예 따른 예 (다수의 대학교)

교육부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검증시효 존치한 예

교육부 지침 따른 예

- 연세대학교 연구진실성 규정

연세대(2007)

제14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연세대(2012)

제14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12.02.28>

우리나라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1. 2. 10. 선고 2010가합57966 판결("국방연구원 사건")

피고의 징계규정 제7조 제4항은 "징계심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한 때는 2002. 1. 경이고 이 사건 도서가 발간된 때는 2002. 3. 5.경으로 이 사건 면직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징계심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서가 발간 이후 이 사건 면직 무렵까지 시중에서 판매 내지 배포되어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도서의 유통을 중단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이 사건 징계절차 개시 전까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면직의 근거가 된 징계심의 요구는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기 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이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학문의 정직성 3대 원칙

Charles Lipson

1.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하거나 발표하는 모든 연구 실적은 실제로 자신이 연구한 것이어야 한다.
2. 다른 연구자의 연구 실적을 인용하거나 참고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단지 학술 용어를 인용한 것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3. 연구 자료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제시해야 한다. 연구실적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료는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림으로 읽는 법 이야기

양지열

(법무법인 가을 대표 변호사)



언어 - 약속된 부호, 서술의 도구

그림은 하나의 장면 X, 한 편의 영화 O



피터 브뤼헬 '바벨탑'

말과 글의 소통 - 내가 그랬어요(?)

법은 약속 - 지배하면 경배의 대상?



제목은?

그림을 읽는 이유, 책을 읽는 이유
- 타인의 눈에 비친 세상

법을 읽는 이유 - 모두의 눈에 비친 세상?
"법의 부지는 응서받지 못한다"



니콜라 푸생 '솔로몬의 심판'

법에 대한 선입견, 내가 아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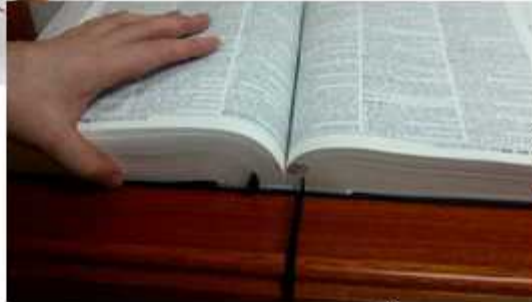
직권주의=군사부일체 vs 변론주의=민주주의



자크 루이 다비드 '소크라테스의 죽음'

법대로 하자? 실체적, 절차적 적법

악법은 절대로 법이 아니다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서류중심 재판
일제 강점기, 개발독재의 유물 = 법 공장
사건별 깊은 판단은 선진화의 척도



장레온 제롬 '배심원 앞의 프리네'
옷을 벗어, 재판 중에 또 벗어 = 공연음란, 법정모독?
민주주의의 회복 배심제
화가의 고민, 왜 그녀만 눈을 가렸을까? 공유 vs me?



•알브레히트 뉘러의 옥판화

당신은 눈을 뜨고 있는가?



10cm 내 눈에만 보여
민법의 의사표시
형법의 객관적 요건 T



"우리 헤어져"

연인, 동거, 사실혼, 법률혼, 결혼



테오도르 제리코 '메두사호의 뗏목' 1818년

법이 말하는 표시, 행위란? 부작위의 행위성

"반모자" = 법률상 위인가? 실상? 형역?

"죽여 버린다" = 법학, 모욕?

법은 개념론의

대응론적 행위, 법에 관한 회의로 해석기관

문제(머리발 = 법학, 피아니스트의 손가락)



젠틸레스키(카르바조) '목을 베는 유디트'

속 사정 참작하기는 하는데... (정당방위 등)
잠발장법, 소극적 저항행위 불인정



베첼리오 '안드르스인들의 주신제'

법의 기준 - 합리적인 인간, 사회 상규
충돌 vs 태극기



술 마시고 취하면 개? 책임능력 없음
지름신이 강령하면? 행위능력 없음



에두아르 마네 '폴리베르제르의 술집'
"부정한 거래" 악마의 변호사?
진실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소득(적중)×호프만계수(나이)-1/3+5천?

손해배상 산출, 정신적 피해, 집단소송, 징벌적 배상



틀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참여권, 저항권



I. 프랑스법 개요

> I. 프랑스법 개요

1. 일반

-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 공세이데따 Conseil d'Etat
- 제5공화국의 특징
- 프랑스의 도서관
- 「프랑스 사회와 문화」, 박균성 역, 서울대, 2004.

2. 법원(法源)

(1) 헌법적 규범(normes constitutionnelles)

- 합헌성 블록(bloc de constitutionnalité) :
 - 1789년 인권선언; 1946년 헌법의 전문(前文); 2004년 환경헌장; 법의 일반원칙

(2) 국제규범(normes internationales)

- 조약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는 헌법 제 55조에 따라 조약이나 협정이 법률에 우선함.

<프랑스 헌법 제55조>

"적법하게 비준 또는 승인된 조약이나 협정은 각기 상대국에서도 시행된다
는 조건 하에 공포하는 즉시 법률에 우선하는 권한을 가진다"

2. 법원(法源)

(3) 법률(lois)

(4) 법률명령(오르도낭스, ordonnances)

- 의회의 입법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정부가 의회의 위임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명령
- 조건
 - 의회의 수권이 정부에 부여되어야 함
 - 수권법률(loi d'habilitation)에 수권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위임의 대상을 정해야 함
 - 법률명령 제정 시 공세이데따 의견의 청취의무
 - 국무회의에서 제정되어야 함

2. 법원(法源)

(5) 명령적 규범 (normes réglementaires)

(6) 판례

II. 법령의 종류 및 형식

1. 입법영역

<프랑스 헌법 제34조의 법률전속사항>

- 시민의 권리와 공적 자유의 행사를 위하여 시민에 부여된 기본적 보장 ;
- 미디어의 자유, 다원주의, 독립 ; 국방을 위하여 시민에 과하여진 시민의 신체상·재산상 의무 ;
- 개인의 국적, 신분 및 능력, 부부재산제, 상속 및 증여 ;
- 중죄 및 경죄의 결정과 이에 관하는 형법 ; 형사소송절차 ; 일반사면 ;
- 새로운 재판기관의 창설과 사법관의 지위 ;
- 모든 성질의 조세의 기준, 세율, 징수의 태양 ; 통화발행제도 ;
- 의회, 지방의회, 재외프랑스인의 대표기관 ;
- 지방자치단체의 상의기관 선출직 구성원의 임기와 직무에 대한 실행조건 ;
- 각종 영조물법인의 창설 ;
- 국가의 공무원과 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적 보장 ;
- 기업의 국유화 및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의 기업소유권의 이전.

1. 입법영역

<프랑스 헌법 제34조의 법률이 기본원칙을 정하는 사항>

- 국방에 관한 일반조직 ;
-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과 그 권한 및 자원 ;
- 교육 ;
- 환경의 보호 ;
- 소유권, 물권, 민사적·상사적 채무에 관한 제도 ;
- 노동법, 노동조합법, 사회보장 ;

<프랑스 헌법 제37조 제1항>

“법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법규명령적 성격을 가진다.”

▶ **II. 법령의 종류 및 형식**



2. 법규범의 분류

법률(lo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 constitutionnelle 헌법법률 - loi référendaire 국민투표에 의한 법률 - loi organique 조직법률 - loi 법률 (또는 loi ordinaire)
위임입법	- ordonnance 오르도넌스(법률명령)
명령(règl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écret 데크레 - décret autonome 독자명령 - décret d'application 집행명령 - arrêté 아레띠 - arrêté ministériel 부령 - arrêté préfectoral 도지사령 - arrêté municipal 시읍면장령
규칙	- circulaire 훈령

▶ **II. 법령의 종류 및 형식**



3. 법령의 형식

(1) 법령표기

<예시>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행정과 국민의 관계개선에 관한 다양한 조치 및 행정적, 사회적, 재정적 질서의 여러 규정을 정하는 1978년 7월 17일 법률 제78-753호.

• 법령의 종류 - 법령번호 - 서명일 - 표제

① 법령의 종류 : loi, ordonnance, décret, arrêté, 각각 L, O, D, A로 약칭하기도 함.

② 법령번호 : 78-753의 78은 연도를, 753은 법령순서를 가리킴

③ 서명일 : 일, 월, 년도 순으로 표기하며 대통령, 국회의장, 장관 등의 서명일을 나타냄

④ 표제 : relative à(~에 관한), portant(~를 정하는), sur(~에 관한), modifiant(~를 수정하는), réglementant(~를 규율하는), favorisant(~를 촉진하는)

Cf 법령의 제명

▶ Ⅱ. 법령의 종류 및 형식



3. 법령의 형식

(2) 조문구성

- 조항 : article. 약자로 art.로 표기.
- 항 : alinéa. 항의 구분은 단락(문단)을 달리함으로써 표시함.
- 호 : 1°, 2°, 3°...

<예시> art.L311-6.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Ne sont communicables qu'à l'intéressé les documents administratifs :

1° Dont la communication porterait atteinte à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au secret médical et au secret en matière commerciale et industrielle, lequel comprend le secret des procédés, des informations économiques et financières et des stratégies commerciales ou industrielles et est apprécié en tenant compte, le cas échéant, du fait que la mission de service public de l'administration mentionnée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L. 300-2 est soumise à la concurrence ;

2° Portant une appréciation ou un jugement de valeur sur une personne physique, nommément désignée ou facilement identifiable ;

3° Faisant apparaître le comportement d'une personne, dès lors que la divulgation de ce comportement pourrait lui porter préjudice.

Les informations à caractère médical sont communiquées à l'intéressé, selon son choix, directement ou par l'intermédiaire d'un médecin qu'il désigne à cet effet dans le respect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L. 1111-7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 Ⅱ. 법령의 종류 및 형식



4. 법전(code)

- 나폴레옹 법전(1804), 민사소송법전, 상법전, 형사소송법전, 형법전
- 가독성 및 법령의 증가에 따른 간소화, 현대화 경향에 부합
- 현재 70여개의 법전 존재

○ 민법전, 민사소송법전, 민사집행법전, 형법전, 형사소송법전, 상법전

○ 노동법전, 교육법전, 관광법전, 도시계획법전, 도로법전, 문화유산법전, 공중보건법전, 사법조직법전, 선거법전, 소비법전, 스포츠법전, 에너지법전, 우편전자통신법전, 외국인입국체류 및 망명권 법전, 공물법전, 사회보장법전, 조세법전, 지방자치단체법전, 환경법전, 재정관할법전, 공용수용업전, 기초지방자치단체법전, 광업법전, 농어업법전, 민간항공법전, 산림법전 등

4. 법전(code)

<예시> 문화유산법전

법률편

- 제1권 문화유산전체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 제2권 고문서
- 제3권 도서관
- 제4권 박물관
- 제5권 고고학
- 제6권 역사적 기념물, 중요문화유산경관, 건축품질
- 제7권 해외령 규정

4. 법전(code)

cf. 법전 제정에 따른 기존 법률의 폐지



4. 법전(code)

◦ 국민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제3권 행정정보에의 접근과 공공정보의 재이용
(이하, 정보공개법)**

제1권 : 행정정보에의 접근권

제1장 행정정보의 청구

제2장 행정정보의 전달

제2권 : 공공정보의 재이용

제3권 : 행정정보에의 접근과 공공정보의 재이용에 관한 문

제4권 : 담당하는 책임관

제4권 행정정보접근위원회 (이하 정보공개위원회)

제1장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제2장 정보공개위원회의 권한

제3장 정보공개위원회의 적용될 수 있는 절차

Livre III :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Titre Ier : LE DROIT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Chapitre Ier : Communication des documents administratifs

Chapitre II : Diffusion des documents administratifs

Titre II :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Titre III : LES PERSONNES RESPONSABLES DE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DES QUESTIONS RELATIVES À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Titre IV : LA 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Chapitre Ier : Composition et fonctionnement de la 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Chapitre II : Attributions de la 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Chapitre III : Procédure applicable devant la 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Ⅲ. 입법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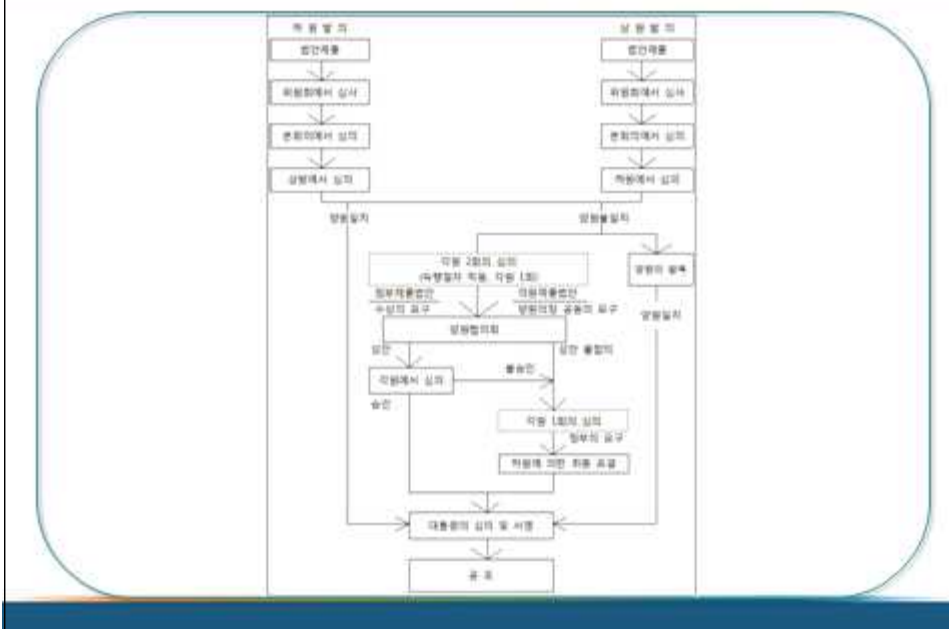
1. 2011-2015년 법률안 제출 현황

회기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제출	채택	제출	채택	제출	채택	제출	채택
정부발의 법률안	35	9	120	71	72	73	84	72
국회발의	25	8	51	37	28	34	43	43
의원발의 법률안	145	1	517	19	293	27	313	12
국민의발의	95	0	491	7	272	18	297	8
심판의발의	50	1	28	12	21	9	18	8
최종 가결된 법률안		10		90		100		84
공포된 법률		10		87		101		82

2. 입법절차

- 의회발의안(proposition de loi)
- 정부발의안(projets de loi)

법안발의
 법률안 제출
 제1원 심의
 제1원 표결
 양원의 법안왕복심의(navette)
 채택
 공포



3. 사전영향평가제도

○ 프랑스는 정부발의법률안에 대하여 사전입법영향평가서를 첨부할 것을 2008년 개정 헌법에 명문화하였음

[illegible]

○ 영향평가의 방법

- 진단
- 추구하는 목표
- 가능한 선택과 새로운 입법을 하는 이유
- 새로운 규정에 따른 예상되는 영향
- 자문활동

3. 사전영향평가제도

○ 입법영향분석이 선행된 주요 법률

- 투명성, 부패와의 투쟁 및 경제생활의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자 법률
- 21세기 법원의 현대화를 위한 2016년 11월 18일자 법률
- 디지털 국가를 위한 2016년 10월 7일자 법률
- 노동, 노사협상의 현대화 및 직업경력안정화에 관한 2016년 8월 8일자 법률
-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2016년 7월 7일자 법률
-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2016년 3월 7일자 법률
- 보건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2016년 1월 26일자 법률
- 난민법 개혁에 관한 2015년 7월 29일자 법률
- 사법과 국정분야에서 법과 절차의 현대화 및 간소화에 관한 2015년 2월 16일자 법률
- 퇴직제도의 미래와 공정함을 보장하는 2014년 1월 20일자 법률

IV. 법령, 정책, 도서검색

. 법령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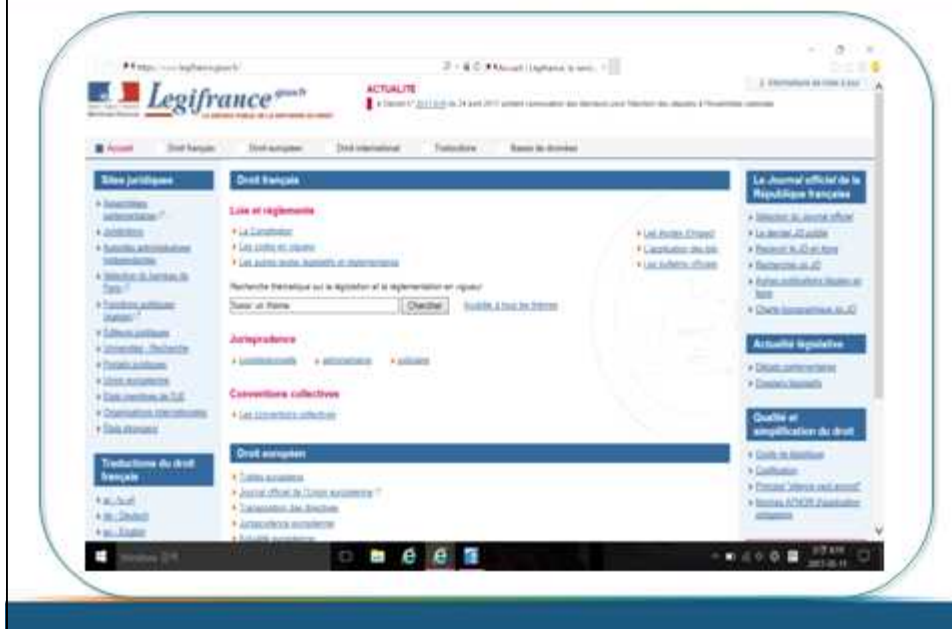
(1) 관보(Journal Officiel) <http://journal-officiel.gouv.fr>



(2) 레지프랑스 (Légifrance) <http://www.legifrance.gouv.fr>

- 우리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해당하는 법령 관련 프랑스 정보의 공식사이트로 1998년에 오픈.
- 법령통계, 정부입법의 경우 사전영향평가서/공세이데따의 정부법안에 대한 의견서, 현재 결정, 행정·사법법원의 주요판결, 20여 개의 법령에 대한 외국어 번역 제공.
- 이 밖에 유럽법(유럽조약, 유럽연합관보, 지침이행조치, 판례)과 국제법(국제협약, 판례)의 카테고리를 담고 있음.

IV. 법령, 정책, 도서검색



IV. 법령, 정책, 도서검색

(3) 기타

○ Jursiclasseur 류리스클라세흐

- 법령 및 법학전반에 관하여 법 이론과 판례를 집대성 해놓은 일종의 백과사전
-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환경법, 노동법, 조세법, 도시계획법 등
-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비치되어 있음.

○ Codes et lois droit public et droit privé / Codes et lois droit fiscal

- 크게 공법과 사법, 세법 두 분야로 나누어
19세기부터 현재까지 공포된 국내 주요법령 및 국제조약을 수록.
- 색인집 활용
cf. <http://www.codes-et-lois.fr>

2. 법제 및 정책 등 (1) vie-publique



IV. 법령, 정책, 도서검색



(2) service-publ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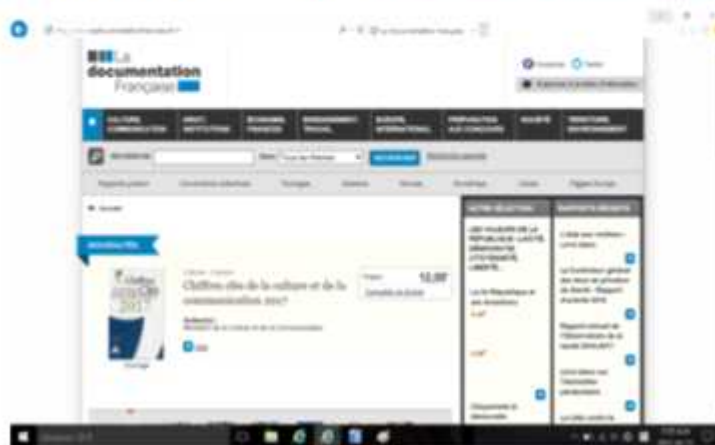


IV. 법령, 정책, 도서검색



3. 도서검색

○ 라 도큐망따시옹 프랑세즈 <http://ladocumentationfrancaise.fr>



법률정보조사과정 교육 소개

- ▶ 목 적: 주요국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와 법률정보의 활용 등을 위한 전문 교육을 통하여 법률정보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고 법률정보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 ▶ 대 상: 국회 직원, 법률정보 공공기관 및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기관 소속 직원 등
- ▶ 교과목: 주요국 법체계 및 법률정보원 등
- ▶ 연 혁

일 정	내 용	비 고
2007. 10.	법률정보조사과정 준비팀 구성 및 교과과정 설계	
	1차(정보전문가).2차(법률전문가) 간담회 개최	
2008. 3.	법률정보조사과정 시범강의 실시	
2008. 9.	법률정보조사과정 교육	5일간
2008. 12. ~ 2009. 3.	법률정보조사심화과정 준비팀 구성 및 활동	
2009. 7.	법률정보조사과정 교육	5일간
2012. 2.	법률정보조사과정 교육	3일간
2015. 5.	법률정보조사과정 교육	3일간
2016. 5.	법률정보검색과정 교육	2일간
2017. 5.	법률정보조사과정 교육	2일간
2018년 5월 중	법률정보조사과정 교육 예정	

2017년 법률정보조사과정

발행일 2017년 5월 17일

발행처 2017년 5월 17일

주 소 2017년 5월 17일

전 화 (02)788-4111

팩 스 (02)788-4285

